

## 건설업계 수주난 내년에도 이어진다

산돌식품 '33떡볶이' 일본서 개점

### SOC예산 감축 경영난 가중 우려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11월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1,529억6,58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1,806억3,652만원) 하락했다. 최근 3개월간 수주금액 역시 3,543억6,057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줄었다.

계속되는 수주난으로 내년에도 도내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된다. 올림픽 관련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각종 대규모 공공공사물량이 발주되지 않기 때문

이다. 또 SOC 예산을 2022년까지 매년 7.5% 감축해 나간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도 경영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2016년 23조7,000억원, 올해 22조1,000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건설업계는 현재로서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계속사업'(리모델링,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수주 확보의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공공공사물량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 등 더 많은 수주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유재규기자koo@**

홍천 산돌식품(대표:이호성)이 도내 식품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프랜차이즈점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

산돌식품은 일본 도쿄 신주쿠 한인타운인 신오쿠보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33떡볶이' 매장이 문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현지 교포가 운영하며 개점 5일 만에 1,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6.6㎡ 규모의 소형 매장이지만,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홍천 본사가 제조한 원재료를 납품받고 본사의 운영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로열티를 지급해 수출효과가 발생한다. 33떡볶이는 일본에 이어 호주 오픈도 추진 중이다. **신하림기자**

## “레고랜드 공사비 전액 투자” 세계적 투자사 관심에 주목

유명 글로벌 투자회사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분공사비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회사는 분공사비 전액을 투자하고 주변 개발부지 역시 모두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엘엘개발이 안고 있는 숙

제를 일시 해

따르면 해당 회사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초대형 사모펀드다. 75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굴리며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도내 유명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도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는 등 도내 투자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 회사의 투자 제안을 협의하기 위해 해외투자사인 영국 말린사 존 아콕슨 개발총괄 사장이 내년 1월

10일째 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계약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시행사인 (주)엘엘개발은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에 이규운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이 대표는 도 올림픽운영국 건설추진단장을 역

비롯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당시 이 대표는 빠듯한 공기 속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테스트이벤트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가 이 대표를 임명한 것을 두고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건설전문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무현·이성현기자**

내달 10일 말린사 제안협의차 방문

이규운 엘엘개발 신임대표 선임

추진단장을 역  
임한 토목전문  
가로 정선 알  
과인경기장을

### ● 새얼굴 ●

#### 이규운 엘엘개발 대표



이규운(59) 엘엘개발 대표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분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홍천 출신. 홍천고,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 도 기술감사담당, 도시토목담당, 시설과장, 올림픽운영국 건설추진단장,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근옥씨와 1남1녀.

# 공공기관 SOC투자 2兆 보강

## 2018 경제정책방향

68개 지역 도시재생 본격화  
공공입찰 일자리 창출 우대  
융복합 시설 BTL 확대 추진

2018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3대 전략

일자리 소득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인적자원 확충	핵심 선도사업 추진 전방위 산업 혁신 규제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공정 경제질서 확립 공정-공평과제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내년 전국 68개 지역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개시하고 정부 예산 외 2조원 규모의 SOC 투자를 늘려 공공주택과 고속도로 건설 등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융복합시설에 대한 BTL(임대형)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건설공사 등 공공입찰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낙찰제를 시행한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과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혁신도시 시·군·27을 앞세워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017년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전 세계 단 10개국(인구 1000만명 이상)에 불과한 국민소득 3만불 시대(현재 환율 기준 3만2000달러)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아직 그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구조적 위험으로 성장 잠재력 또한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으로 경제, 사회 전 분야 혁신성장을 본격화해 '성장-소득-삶의 질'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소득 및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전략을 필두로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 대응 및 거시경제 안정 등 2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및 국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과제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추진 및 '갑을관계' 등 불공정행위 근절, 생활밀착형 BTL 사업 확대,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 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 및 국민생활,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2조원 투자 보강으로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고속도로 건설을 확대하고 내진, 내화 보강 등 안전분야 시설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등 휴식이 있는 삶 조성과 서민 주거 금융개선 및 취약차주 보호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기자 skbong@](#)

#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본격화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3조1000억원 줄어 들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임대와 산단, 고속도로 건설 등 2조원 규모의 SOC 공공투자가 확대,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 등도 본격화되고 생활밀착형 복합시설에 대한 BTL(임대형민간투자) 사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망)은 0.8% 수준으로, 올해 예상치 7.8%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목표 성장률인 3.0% 수준 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에도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투자 연착륙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및 성장세를 유지, 확산하고 일자리 등 민

건설투자 증가율 0.8% 그쳐  
공기업 통해 SOC 투자 보강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BTL 확대  
내진보강·노후시설 안전도 강화

생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과는 별도로 공기업을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SOC 투자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SOC 예산 감축 우려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시 공기업을 통해 SOC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를 거쳐 SOC 예산이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증액됐지만, 건설투자 위축 우려

가 확산됨에 따라 투자보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사업과 별도로 공기업을 통해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 자금 4000억원을 비롯, 고속도로 건설·개량사업에 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 신재생 발전시설 및 발전소 안전·환경시설 개선사업(2000억원)과 송배전 보강사업(1000억원)도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건설공약인 도시재생 '뉴딜'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최근 선정된 68개 시범지구에서 본격적인 재생사업에 착수,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내년 중 첫삽을 뜰 계획이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 도로공간 일체화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사업도 본격도에

올려놓을 방침이다.

내진보강사업과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 내화보강 지원사업도 산업은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사상 처음으로 국고 570억원을 투입하고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융복합시설 BTL사업을 통해 복지, 문화, 안전 등 생활밀착형 시설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내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을 복합 개발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런 유형의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 시 국고보조율을 10%p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분기 중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해외인프라 수주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방안'을 마련, 투자개발형사업 등 분야별 해외건설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핵심국가별 전략적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해 해외 민간투자(PPP)사업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EDCF 및 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4조원으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공동보증제 합의 요건도 5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기자 skbong@](#)

# 건설공사 지체상금률 '절반 인하' 무리한工期 맞추기 부작용 줄 듯

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던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이 현행 대비 절반 인연 18.25%(하루 0.05%·계약금액 기준)로 인하됐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의 고용·안전 등 사회적책임 가점은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 및 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 지체상금률이 하루 0.05%, 연 18.25%로 인하됐다. 종전 지체상금률은 하루 0.1%, 연 36.5%에 달해 '고리대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금리 수준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부담 때문에 공기를 서두르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와 더불어 용역과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률도 절반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용역은 하루 0.125%, 물품은 0.075%가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가 강화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중심제에서 사회적책임 점수가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점으로 부여하는 사회적책임은 건설인력 고용과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발주기관에 따라 각각 0.2~0.4점 내외의 배점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예규 개정으로 항목별 배점도 2배 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일부 낙찰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발주기관들은 이에 따라 개별적인 세부심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가계약법 예규 개정 시행

'고리대금' 같은 지체상금률  
H 0.05%·年 18.25%로 '↓'  
용역·물품납품 분야도 낮춰

중심제 사회적책임 '1점→2점'  
자금조달 어려운 영세기업 등  
구체적 선금지급 사유도 담겨  
하도급 승인기준, 입찰공고 명시



개정 예규는 또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 사유를 구체화했다. 긴급한 공사나 원자재가 급등, 환율 변동 등의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역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거부 및 하도급 승인 기준·절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명시 규정이 없어 사업수행자가 혼란을 겪거나 불법 내지는 불공정 거래로 몰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 절차가 공고에 명시되면 이 같은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 규칙 및 예규는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간을 공휴일 포함 3일에서 공휴일 제외 3일로 연장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노무비 계좌를 통해 발주기관이 직접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구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동 시행규칙 및 예규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나 발주기관의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송권기자 skbond@

## 건설업 '숙련 인력' 부족 심각

올 하반기 건설업종의 숙련인력 구인이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종 인력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국인 대상 직능수준을 1~4 수준으로 나눠 평가한다. 숫자가 클수록 직능 숙련도가 높다는 의미다. 1수

준은 '경력·자격증·학력 무관'으로 숙련도가 가장 낮은 등급이고, 4수준은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인 높은 숙련도를 보유한 인력이다.

그런데 1수준 인력의 미충원율은 1.4%로 건설사의 구인 수준과 거의 일치했다. 2-1수준이 3.9%로 뒤를 이었고 △2-2수준 11.0% △3수준 5.9% △4수준 12.6%로 3수준을 제외하고는 숙련도와 미충원율

이 반비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통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 숙련도와 미충원율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며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체 3만785개소 중 59.5%는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부족인력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금(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계획 중인 사업체도 47.8%에 달했다.

한편 올 하반기 전체 산업군 중 건설업의 구인인원은 8만1000명으로 제조업(15만1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6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 17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업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권수 고운건설 대표, 최기전 다인건설 대표, 강완수 대아이앤씨 사장, 유 회장, 피영민 성보건설산업 대표, 황근순 이엔종합건설 대표.

### 2017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

## 고운건설·다인건설 '대상' 영예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업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상은 고운건설(주)과 다인건설(주)이 공동 수상했다. 고운건설은 지난 22년간 윤리경영을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전 임직원이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다인건설은 비리 제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고경영자부터 말단 사원까지 위반 시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 우수상에는 대아이앤씨(주), 성보건설산업(주), 이엔종합건설(주)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업체에는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 배점(2점)이 부여된다.

유주현 건설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진 기간산업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지만 일부 그릇된 관행과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며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윤리경영과 나눔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해 그 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 만들어졌다.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다. 김태형기자 kth@

###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공표

# 평균 4.63% 올라... 중급기술자 상승폭 최대

(5.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일 노임가격이 평균 4.63% 상승한다. 대형사 중심으로 기술자의 임금을 인상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고,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구간은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집계됐다.



발주기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초급 17만8021원... 5.23%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는 내년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적용할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노임가격'을 27일 공표했다.

노임가격은 지난 7월 중 22일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이며, 조사 기업은 총 283개사, 인원은 총 6525명이다. 이 가운데 212개기업, 총 5605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응답자는 등급별로 스펙급 3826명(68.26%) △고급 1370명(24.44%) △중급 354명(6.32%) △초급 55명(0.98%)이다.

11~2월 동절기 보전임금을 반영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일 노임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펙급 32만2738원 △고급 27만1764원 △중급 22만5619원 △초급 17만8021원이다.

전년도 대비 스펙급 3.71% △고급 3.76% △중급 5.83% △초급 5.23%가 각각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8800원~12400원가량이 오른 수치다.

총 150개사가 응답한 임금동향 조사에서는 임금인상과 동결, 하락이 각각 84개사(56%), 61개사(40.67%), 5개사(3.33%)로 집계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기술자 평균임금과 동절기 보전임금 등을 조사한 임금실태 결과는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임금실태조사에 응답률이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물가상승률과 노사 관계 안정 등을 반영해 기술자 임금을 인상하면서 노임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은 발주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4년간 공표된 노임가격은 최소 3.27%에서 최대 7.7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유...

# 건설공사 입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기고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겨울 초입으로 들어서 갑자기 닥친 한파가 매섭던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건설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수단 60여명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선진지역 견학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12월1일 강원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돗토리현을 공식 방문해 노가와 사토시 돗토리현 부지사, 시모모토 야이치로 돗토리현 건설협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으며 더불어 앞으로 두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건설관련 사회보장 보험제도와 지진에 대비한 시설준비 현황, 공공공사 입찰제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돗토리현 청사의 내진과 면진 시설을 직접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 내진시설과 설계에 관련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건축물, 그것도 관공서 건물인 돗토리현 청사의 면진 시설 설계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은 연수단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일본이지만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의식수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건설인을 비롯해 정부 관계당국, 국민들이 개선된 건설문화와 안전비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를 추진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임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일본의 입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연수단

일행 중 한사람이 일본의 관급공사 낙찰률 결정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답변은 예정가격 대비 98% 선에서 낙찰률이 정해진다는 것이었다.

사고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낙찰률은 90%를 상회했으나 1999년 적격심사 낙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나서 20년 가까이 최고 낙찰률은 87%선으로 후퇴했으며 현재까지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에 일본의 낙찰률은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가장 대비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사람으로서 부럽기만 한 제도이다.

공공사업의 낙찰제도는 건설업계의 경영안정과 개선을 위하면서도 완공된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총생애주기의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우리 건설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건설 단가로 설계되는 관행도 문제지만 100% 비용으로 설계된 예정가격 이하에 정형화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거니와 최고 낙찰률이 87%인 지금의 현실에서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안전을 도모하거나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하기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낙찰률은 평균적으로 2008년 86.1%에서 2013년 84.9%로 하락했으며 물가상승, 인건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2013년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2015년 3월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된 실적공사비 적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저가 낙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계의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초 개최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적정 공사비만 지급되어도 경제성장률 증가효과는 0.2% 포인트, 일자리 창출효과는 4만 7500명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실업률은 0.15% 감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는 1조665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소비 증가효과는 1조 1800억원 규모로 별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 시설사업 없이도 공사비 산정방법 개선과 낙찰제도 혁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달성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시설사업 낙찰률의 정상화는 건설업계의 경영을 안정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 자재 및 장비 업체의 경영여건 또한 정상화되어 건설근로자에게도 양질의 근로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설산업 선진국인 일본의 건설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돗토리현,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등 일본 우수 건축물과 유적지를 돌아보며 연수를 마무리했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뜻깊은 기회였다.

# 건설투자 '후퇴기' 진입... 건설사 수익성도 '내리막'

## 건설연, 시장동향 분석

3분기 영업이익률 하락  
건설투자 증가폭 둔화  
토목부진 1년넘게 지속  
내년 마이너스 전환 우려

건설투자 증가폭이 꺾이고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건설경기 후퇴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시장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3분기 건설투자가 꼭짓점을 찍고 후퇴기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7.6% 증가했지만 2분기의 8.0%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5년 1분기에 4.0%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총 2년9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3년 1분기~1996년 2분기까지 3년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최장이다.

하지만 증가폭의 둔화가 뚜렷하다. 지난해 4분기 11.6% 증가 이후 올해 1분기 11.3%, 2분기 8.0%, 3분기 7.6%로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토목투자 부진이 심각하다. 2015년 4분기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1년넘게 지속되고 있다. 올 3분기에도 전력시설 용지조



성 등의 감소로 토목투자가 5.1% 줄었다. 만약주거용 건축(15.5%)과 비주거용 건축(8.9%)까지 부진했다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가 될 뻔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은 '불황-회복-호황-후퇴'의 4단계로 구분된다. 건설투자는 2003년과 2009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대략 4~5분기 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연은 최근 건설투자가 후퇴기 초입에 이미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박철한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투자의 순환 변동 추이는 확장국면에서 정점을 지나 수축국면으로 돌아서는 후퇴기 초입에 들어섰다"며 "일반적으로 후퇴기는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재고가 누적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건설연은 내년 3~4분기 사이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건설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의 '2017년 3분기 기업경영분

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3분기 5.94%로, 2분기(7.33%)보다 1.3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영업이익률도 8%에서 6.92%로 1%포인트 넘게 빠졌다. 건설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 역시 2분기 871.42%에서 3분기 711.28%로 급감했다. 차입금 의존도(18.52%→19.43%)도 소폭 올랐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10.80%)과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135.16%)의 개선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지혜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3분기 들어 건설업의 수익성 지표 하락이 두드러졌다"며 "향후 성장성 지표마저 꺾이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kth@